

# 지역균형발전 · 현장 안전강화 앞장

### 김윤덕 국토부장관, 취임 후 현장 찾아 애로 청취 · 해결... '소통 의지' 평가받아

전북 출신인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이 취임 한달여동안 지역균형발전과 안전강화를 위해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발전은 뒷받침할 핵심 인프라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가덕도신공항은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한 주관 시공사가 이탈하고 사업자 선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TK통합신공항은 10조원을 웃도는 막대한 사업비 조달 구조가 발목을 잡고 있다.

따라서 김 장관은 "가덕도 부지조성 공사는 연내 입찰을 목표로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표명과 "TK통합신공

을 높여 지역균형발전을 이룩겠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이 가운데 '가덕도신공항 예정지'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예정지'를 찾아 균형

항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일정 정상화 의지를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전남 무안 국제공항 대형 건설사고 현장을 찾아 유가족들과 면담을 통해 그들을 위로하는 한편 안전확보를 위한 행보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현장 사망사고에 "엄정 대응"을 주문한 직후인 지난달 29일과 이달 1일 연이어 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안전 최우선' 원칙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두 차례 간담회에서 건설 안전을 높이기 위한 발주청과 시공·설계·감리 업계의 역할, 건설 주체별 안전관리 책무를 규정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 제도 개선 방안과 함께, 적정 공기와 공사비 확보 의지를

밝혔다.

또한 지난 9일에는 세종시 종합청사에서 국토부 공무원과의 워크숍을 가지고 소통 자리도 마련했다.

이날 김 장관은 국토부 본부와 지방국토관리청, 항공청 등 소속기관 안전담당자 워크숍에 참석해 "실무진 의견을 토대로 현장의 실정을 온전히 반영하고, 시스템적 접근으로 실효성 있는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중심의 점검과 실무진 목소리를 반영해 현장 주도형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균형발전과 안전확보를 위해 한 달간 숨가쁘게 건설현장을 찾은 김 장관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며 문제 해결을 위해 업계 의견을 경청하는 등 소통 의지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권희성 기자

# "농촌, 삶·일·쉼터로"

### '새정부 농촌공간정책 방향·과제' 국회 토론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과 함께 '새 정부의 농촌공간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고품질과 인구 감소로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리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의원은 인사말에서 "농촌은 우리 사회의 근간"이라며, 고품질과 인구 감소로 인한 인프라 붕괴 등 농촌의 위기를 진단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균형성장 및 재생에너지의 거점으로서 농어촌 육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했음을 강조하며, 농촌을 삶터·일터·쉼터 기능을 갖춘 경쟁력 있는 생활공간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토론회에서는 한이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실장이 농촌을 미래 공간이자 전략적 투자 대상으로 전환하고 범부처 협력 및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여혜진 건축공간연구원 센터장은 농어촌의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컴팩트터브형 등 세 가지 공간재구조화 모델을 제시했다.

또한 최재문 김재농촌활력센터



이사장은 청년농부와 생활인구가 지역 자원을 활용해 농촌소멸에 대응하는 성공 사례를 공유했다.

이어진 토론회에는 이유지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 위원장(부산대 교수)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안유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장, 신지훈 한국농촌계획학회 회장(단국대 교수), 이상의 전남 함평군수(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부회장), 최봉문 대한민국도·도시계획학회장(목원대 교수), 황종대 청주시활성화재단 대표이사 등이 토론자로 나서 농촌공간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하여 열린 토론을 펼쳤다.

윤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등 농어촌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해 왔으며,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만호 기자



국회 본회의장에 뜬 '국회 위원장당 사례' 자료

'국회의원 위원장당 사례' 자료가 송출되고 있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정치에 관한 질문'에서 이혜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진=뉴시스 제공)

# 도의회 예결특위, 도 제2회 추경안 심사 '진행중'

###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후 소비심리 위축 · 시장 침체 우려 표명 "도내 소비 사각지대 · 미사용 사례 최종 점검까지 철저히" 당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지, 전주11)는 15일,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이틀째 일정을 진행하며 기업유치지원실, 미래첨단산업국, 농생명축산산업국 등 7개 실·국·원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이어갔다.

이날 예산안 심사에서 김희수 의원(전주6)은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강화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상인회 운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묻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무인력의 인건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래첨단산업국에서 바이오 산업과 방위산업이 병행 추진하기 보다는 전북의 미래산업 전략 차원에서 방위 산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두 산업을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강화 지원 사업과 관련해 전통시장 활성화뿐만 아니라, 대형마트와의 경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전 시군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계획과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추진을 주문했다. 아울러 우수 상품 판로개척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부스 지원의 사유에 대해 질문하며, 이번 추경에 반영되어야 할 만큼 시급하고 긴급한 민생예산 지원 사업 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강태강 의원(군산2)은 민생회복 소

비쿠폰 지원 사업과 관련해, 1차에 이어 2차 지원이 이뤄지는 현 시점에서 그 효과에 대해 질문하며, 지원 이후에도 소비심리 위축과 시장 침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비 사각지대와 미사용 사례에 대한 최종 점검까지 철저히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과 관련해 복지 지원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현행 지원제도의 장·단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보완책 마련을 당부했다.

권요안 의원(완주2)은 피지컬 AI 사업 지원과 관련해 유치 지역에 대해 질문하며, 지역 선정 과정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하며, 조속한 시행으로 사업 추진과 정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윤정훈 의원(무주)은 축산인 한마음 대회 개최 사업 예산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올해 예산안에 편성해 놓고도 집행하지 않은 채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재원과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질문하며, 실질적 운영을 위해 건강검진 등 협업을 통한 예산의 효율성과 효과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농촌유학 활성화 유학경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신청이 있을 때마다 추경에 편성하여 지원하는 방식은 문제라며, 계획상 있게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종명 의원(남원2)은 배수개선 사업과 관련해 극한 경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 지원 예산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내년 본예산에 저류조 설치 및 배수펌프 설치 등을 반영해 침수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당부했다.

이명연 의원(전주10)은 저탄소 한우 축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내용과 규모를 질의하며, 저탄소 한우 유전형질 발굴 등 추진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전북도가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기보다는 정부 차원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명지 위원장(전주11)은 축산인 한마음 대회 개최 사업과 관련해 행사의 내용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 사업 추진이 필요한데, 축산인이 전무한 전주시에 대해 개최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농촌유학 활성화 유학경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에 있어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 전용태 도의원 "지방소멸 극복 특위 활동기간 연장해야" 제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특별위원회 전용태 위원장(진안)이 제42회 임시회에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대응 강화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해 10월 4일에 시작된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다음달 3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나, 정책 추진 및 실행의 지속성과 연속성, 지역사회 참여 기반 확대, 중앙정부 정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활동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

전용태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처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그에 따른 문제는 중·장기적 시야에서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이다"며,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제도 및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중앙정부가 함께하는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 새만금 수변도시 '첫 분양' 앞추고 17일 익산역서 홍보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 이하 공사)는 새만금 수변도시의 '첫 분양'을 앞두고 오는 17일 KTX 익산역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지역 주민과 이용객을 대상으로 시민 참여형 홍보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호남권 주요 교통 거점을 활용한 사전 판촉 활동의 일환으로, 참여형 홍보활동과 현장 상담을 통해 잠재 수요층과 직접 만나 수변도시의 가치와 미래 성장 가능성을 체감하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행사 현장에서는 2025년 하반기 공급 예정인 그린생활시설용지(8,820㎡), 단독주택용지(2만242㎡)의 입지 특성과 수변도시 개발 방향을 소개하고, 새롭게 개설된 카카오톡 분양상담센터 채널 홍보를 통해 전화나 방문없이도 빠르고 정확한 분양 소식을 만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아울러 "기관장과 경영진도 행사에 함께 참여" 시민들의 의견과 궁금증에 귀를 기울이며 현장 소통을 강화한다. 또한 맞춤형 상담 부스를 운영해 방문객 개별 질의에 대응하고, 필수요기반 정보를 확보하여 향후 분양 전략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공사 나경균 사장은 "이번 익산역 홍보행사는 지역민과 잠재 수요자가 수변도시의 미래 가치를 직접 체감하고, 첫 분양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

# 민주 이성운 의원, '전북발전 4법' 소개 마무리

### 전북특별법 · 조세특례제한 일부 개정 법안 등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정운 의원(전주중)이 15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전북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연계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를 끝으로 전북발전 4법 소개를 마무리했다.

이번 개정안들은 △도지사에게 전북 내 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이들 입주기업들의 법인세 등 감면근거를 법제화함으로써 전북의 기업 투자·유치를 증진시키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전북은 제주, 강원에 이어 지난 2024년 1월 세 번째 특별자치도로 출범했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법에는 도지사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담겼다.

그러나 지정 근거 외에 전북 내 투

자진흥지구 입주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세제 지원을 보장하는 법소안은 없어, 투자 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성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두 개정안들은 바로 이러한 입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전북 지역으로의 기업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투자진흥지구의 조세 등 감면 근거가 제도화된다면, '특별자치도'로서의 지역균형발전 취지를 더욱 살리는 것은 물론 전북 투자진흥지구 개발 활성화를 두텁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성운 의원이 발의한 '전북발전 4법'은 전북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전북연구원'과의 협력이 일관된 결실이다.

이성운 의원은 "전북연구원은 전북에 대한 애정이 담긴 고민에서 출발해,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을 이끌어낼 줄 아는 자질을 갖췄다"면서 "여의도-전북 협업의 성료에 애써주시는 전북연구원 연구진들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 명단공개에도 버티는 만성고액채납자

### 공개 대상자 중 10년 이상 장기 채납자 52%에 달해

지방세 고액상습 채납에 따른 실효명단공개도 30년 넘게 버티거나 9,000건 넘게 채납하는 악성채납자들이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를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채납해 명단공개 대상이 된 채납자 4만5,073명 중 10년 이상 장기 채납하는 인원이 2만3,420명으로 52%에 달했다.

명단공개 제도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1년 이상 채납하고 1,000만원 이상 채납자를 대상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간접 제재로, 2006년 도입됐다. 채납 기간별로 보면 10년 미만 채납자가 2만1,653명으로 명단공개자의 48%에 달했다. 10년 이상 장기채납자

의 구간을 세분해서 보면 △10년 이상 15년 미만 1만 329명(22.9%) △15년 이상 20년 미만 5,888명(13.1%) △20년 이상 25년 미만 3,789명(8.4%)로 확인됐다. 특히 25년 이상 채납한 인원은 3,420명으로 7.6%를 차지했다.

한편 채납자별로 채납 건수를 분석한 결과 10건 이상 채납한 사례가 2만 8,038건으로 62.2%를 차지했다.

10건 이상 채납자를 세분하면 10건 이상 30건 미만인 1만 6,165명으로 35.9% 5명 중 1명 꼴이었다. △30건 이상 50건 미만 5,702건(12.7%) △50건 이상 100건 미만 4,190명(9.3%), 100건 이상도 1,981명(4.4%)에 달했다.

최장기간 채납자는 41년을 채납한 71세 김모씨로 채납액은 3,300만원이었다. 최다 건수 채납자는 8,517건을 채납한 49세 김모씨로 11억9,300만원의 지방세를 채납했다.

한병도 의원은 "금융·신용평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법적 근거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